

## ● 제1장 국토계획법 ●

### [제1절. 총칙]

#### 0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? [제30회]

도시·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, 그 지역을 체계적·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·군관리계획

- ① 일부관리계획
- ② 지구단위계획
- ③ 도시·군기본계획
- ④ 시가화조정구역계획
- 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

☞ [기본서 참고 페이지] : p.33

#### 0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[제25회]

- ① 하천
- ② 유수지
- ③ 하수도
- ④ 사방설비
- ⑤ 저수지

☞ [기본서 참고 페이지] : p.146

#### 03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?

[제26회]

- ① 교통시설 - 폐차장
- ② 공간시설 - 유원지
- ③ 방재시설 - 저수지
- ④ 환경기초시설 - 하수도
- ⑤ 공공·문화체육시설 - 청소년수련시설

☞ [기본서 참고 페이지] : p.146

**04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[제27회]**

- ① 화물터미널
- ② 공영차고지
- ③ 복합환승센터
- ④ 화물자동차 휴게소
- ⑤ 교통광장

☞ [기본서 참고 페이지] : p.146

**05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? [제28회]**

- ① 교통시설 - 건설기계검사시설
- ② 유통·공급시설 - 방송·통신시설
- ③ 방재시설 - 하천
- ④ 공간시설 - 종합의료시설
- ⑤ 환경기초시설 - 폐차장

☞ [기본서 참고 페이지] : p.146

**06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[제26회]**

- ① 공원
- ② 도로
- ③ 대학
- ④ 폐기물처리시설
- ⑤ 녹지

☞ [기본서 참고 페이지] : p.214

**07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·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·군 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[제29회]**

- ㉠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- 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- 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

- ① ㉠
- ② ㉠, ㉡
- ③ ㉠, ㉢
- ④ ㉡, ㉢
- ⑤ ㉠, ㉡, ㉢

☞ [기본서 참고 페이지] : p.33

08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? [제30회]

“( 가 )”(이)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대한 ( 나 )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( 나 )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·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

- ① 가: 용도지구, 나: 용도지역
- ② 가: 용도지구, 나: 용도구역
- ③ 가: 용도지역, 나: 용도지구
- ④ 가: 용도지구, 나: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
- ⑤ 가: 용도지역, 나: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

☞ [기본서 참고 페이지] : p.31

09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? [제15회]

- ① “도시·군계획”이라 함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·군기본계획과 도시·군관리계획을 말한다.
- ② “지구단위계획”이라 함은 도시·군계획 수립대상지역 전부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말한다.
- ③ “기반시설부담구역”이라 함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.
- ④ “국가계획”이라 함은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계획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.
- ⑤ “도시·군계획시설사업”이라 함은 기반시설을 설치·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.

☞ [기본서 참고 페이지] : p.①30, ②33, ③33, ④30, ⑤32

10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제20회]

- ① “도시·군계획”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.
- ② “공공시설”은 기반시설 중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.
- ③ “도시·군기본계획”은 시·군·구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.
- ④ “광역도시계획”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.
- ⑤ “용도구역”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·군수가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.

☞ [기본서 참고 페이지] : p.①30, ②32, ③31, ④30, ⑤31

**1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[제21회]**

- ① 도시·군계획은 도시·군기본계획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.
- ②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.
- ③ 지구단위계획은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.
- ④ 도시·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·군계획사업에 포함된다.
- ⑤ 기반시설은 도시·군계획시설 중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.

☞ [기본서 참고 페이지] : p.①30, ②31, ③33, ④33, ⑤32

**[제2절. 광역도시계획]**

**0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[제29회]**

-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③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.
-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·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·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☞ [기본서 참고 페이지] : p.①42, ②41, ③44, ④41, ⑤46

**0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[제26회]**

- ①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·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.
- ②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.
-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-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☞ [기본서 참고 페이지] : p.①35, ②41, ③44, ④46, ⑤49

**03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[제19회]**

- ①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.
- ③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·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④ 광역도시계획을 시·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
☞ [기본서 참고 페이지] : p.①43, ②47, ③43, ④49, ⑤없음

**04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제27회]**
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②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.
-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,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.

☞ [기본서 참고 페이지] : p.①42, ②44, ③42, ④48, ⑤41

**05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 [제28회]**
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서 관계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②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·도,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·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.
-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.

☞ [기본서 참고 페이지] : p.①42, ②47, ③44, ④48, ⑤46

**06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 [제16회]**

- ①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.
- ②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-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·군·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고하여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
☞ [기본서 참고 페이지] : p.①41, ②46, ③47, ④47, ⑤48

**07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[제31회]**

- ①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-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-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·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☞ [기본서 참고 페이지] : p.①44, ②45, ③47, ④48, ⑤49

## ● 제1장 국토계획법 ●

## [제1절. 총칙 정답]

번호	01	02	03	04	05	06	07	08	09	10	11	12	13	14	15
정답	②	③	①	⑤	④	③	⑤	①	③	④	⑤	.	.	.	.

## [제2절. 광역도시계획 정답]

번호	01	02	03	04	05	06	07	08	09	10	11	12	13	14	15
정답	④	②	①	②	③	④	④	.	.	.	.	.	.	.	.

“올려드리는 프린트는 정답과 기본서 관련 페이지만 제공되며, 별도의 해설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

기출문제 교재는 2월말에 출간되며, 기출문제 해설특강은 3월~4월에 진행됩니다.”

- 오시훈교수-